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기준금액 변경

- (개요 및 현황)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를 FIU에 보고
-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 (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 (예시: 출금)가 대상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님)

<보고대상·비대상 거래 예시>

보고대상 O	보고대상 X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 '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 ('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08년 3,000만원 이상)하였으며, '10년 이후 2,000만원을 유지

- (CTR 기준금액 변경 필요성)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보고 제도를 해외 주요국 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는 수준으로 개선
- 현재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은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 (한화 약 1천만원) 보다 높음
 - 특히 호주·미국 등 주요국은 자금세탁·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주요 국가	주요 내용
호주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Australian Business Number)는 물품 (Goods) 및 용역 (Service) 제공에 대해서 10,000달러 이상의 현금거래 제한 ('19.7월부터) ※ 금융회사는 10,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CTR 보고
미국	모든 사업자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 취급시 당국에 보고 (Form 8300)
프랑스	내국인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 1,000유로 (한화 약 1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제한

- 또한, 입출국 시 1만달러 (한화 약 1,000만원)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외국환거래법)와의 정합성을 확보

- **(시행령 개정안)**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구체 사례 예시>

거래 사례	보고대상	비고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 은행 계좌로 <u>물건대금(1,200만원) 이체</u>	X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음
甲이 乙에게 물건대금(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u>현금</u> 으로 지급	X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u>수표로 인출</u>	X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현황)**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의무부과 필요성)** FATF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 (高위험: 강화된 조치, 低위험: 간소화된 조치 등)을 요구*

* FATF는 각국이 자금가치 이전 서비스(MVTS) 사업자, 지급수단 발행·운영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업자는 이에 해당

-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가	주요 내용
미국	화폐전달서비스업자(MTB)에 의무를 부과하며,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발급자, 매집자, 시스템 운영자에 의무를 부과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상 자금이동업자*에게 의무를 부과('09년) * 상품·서비스등 제공자에게 대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고객으로부터 정해진 액수의 금전을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국	특정비금융기관인 지급결제조직에 의무 부과

- **(시행령 개정안)**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 업권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 ①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의무 적용
- ②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

다.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 **(현행)**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에 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지 않고 있음

*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등록

- ☐ **(의무부과 필요성)** FATF는 대부업(lending)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AML/CFT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업자에게 AML/CFT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대부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 **(시행령 개정안)** 대부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 대부업자는 수신기능이 없는 등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으며, 거래가 주로 대형 대부업자를 통해 발생

** 자산규모 500억 이상의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 과반 이상(약 60%로 추정)을 차지하며, 법령준수 등을 위한 보호기준 수립 및 보호감시인 임면 등 他 대부업자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담(대부업법 제9조의7, 동법 시행령 제6조의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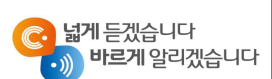
3 향후 추진일정

- ☐ **입법 예고** (9.17일~11.16일, 60일간), 규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붙임 1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1. 설립 목적

-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 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 FATF 설립 이후 관할 범위가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 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등으로 확대

* 북한, 이란의 WMD (대량살상무기,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2. 주요 기능

-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AML(Anti-Money Laundering) & CFT(Counter Financing Terrorism)

-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

3.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 파리 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국제사회는 테러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

- ☐ 파나마 페이퍼스*('16.4월)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 요구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4.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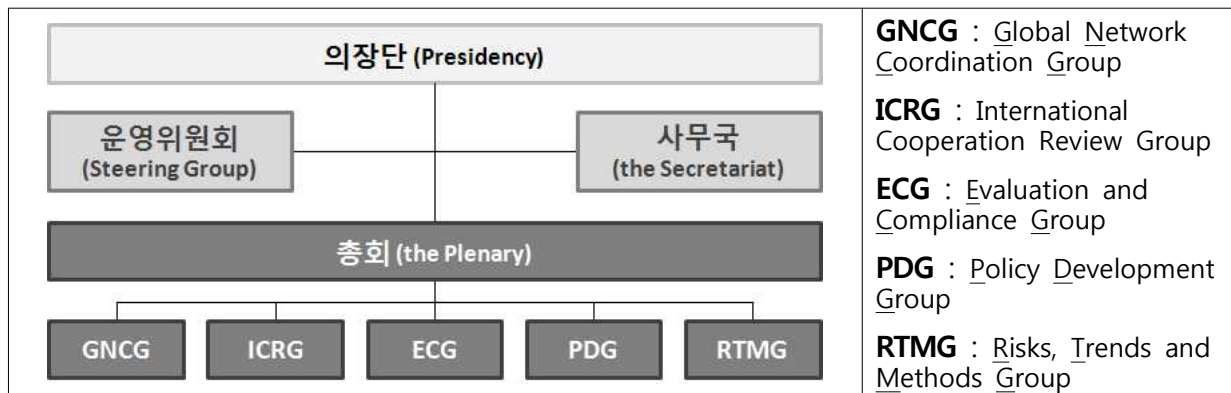
□ 회원 구성

- 정회원(35개국 + EC, GCC), 준회원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 (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OECD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계 (37)	26	9	2

□ 조직 구조



□ FATF 의장

- 의장은 FATF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 · 운영위 등 주재
 - * 신제윤 의장은 '14.7~'15.6 부의장직 수임 후, '15.7~'16.6 의장직 수행

□ 총회 : FATF 최고 의사결정기구

- FATF 국제기준 및 정책 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 · 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 *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

붙임 2 FATF 상호평가 개요

- 상호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AML/CFT 제도를 FATF 평가방법서(Methodology)에 의거 종합 점검·평가하는 과정

자금세탁·테러자금 차단 통한 금융 투명성과 사회 안전 강화

* '12년부터는 “대량살상무기(WMD)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협력	투명성 장치
금융기관과 특정 전문직에 의무부과/이행감독 - 고객확인 - 기록보관 - 의심거래보고 - 고액현금보고	자금세탁 범죄화, 범죄수익 몰수, 금융정보 수집·제공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테러자금 즉시동결, 금융정보 수집·제공, 관련자 대상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자금세탁·테러·범죄 관련 정보 교환, 범죄자산 몰수, 범죄인 인도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에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를 추가

- 후속점검 절차와 상호평가 수검 5년 후 현장실사(on site) 점검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상호평가를 상설화

※ 상호평가 후속점검과 FATF 총회 보고주기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font-size: 4em; vertical-align: middle;">{</div>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p>정규 후속점검: 3년 (5년내 1회)</p> <p>강화된 후속점검: 1~1.5년(5년내 3회)</p> <p>ICRG 점검대상: FATF 총회(4개월)</p> </div> </div>

- FATF 상호평가 수검국 84%가 “강화된 후속점검” 또는 “ICRG 점검절차” 대상이 됨

< FATF 상호평가 수검국 (19개국) >

구분	국가	후속점검 주기
정규 후속점검 (Regular Follow-u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3국)	3년 (5년내 1회)
강화된 후속점검 (Enhanced Follow-up)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15국)	1~1.5년(5년내 3회)
ICRG 점검절차 (ICRG Procedures)	아이슬란드 (1국)	4개월(매 FATF 총회시)

붙임 3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규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제2조(금융회사등)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u>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u> <u>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다만 제9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규모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u>
제3조(금융거래)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제3조(금융거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u> <u>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u>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u>2천만원</u> 을 말한다.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 ----- ----- <u>1천만원</u> 을 말한다.
제10조의2(고객확인 의무의 적용 범위	10조의2(고객확인 의무의 적용 범위 등)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감독·검사등) ③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 6. (생략)

7.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 ~ 바. (생략)

<신 설>

<신 설>

① -----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15조(감독·검사등)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다만 제9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규모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